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경제안보 Review

경제안보 분석

미국 상호 · 기본 관세 관련 국내 정치 · 법적 쟁점 분석

경제안보 현안

美 「AI 확산 규칙」 철회 및 AI 반도체 수출통제 동향

경제안보 연구동향

「예정된 분열?: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한 미국과 EU의 대응」

EWS 공급망/에너지 동향

- 중국, 중국 희토류 수출 규제 관련 가격 동향
- EU,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종식 로드맵 발표
- 중국, 핵심광물 수출통제 관련 정책 추진 동향
- 미국, 정부 간 핵심광물 TF 법안 발의



온라인 다운로드 -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게시판

https://www.mofa.go.kr/www/brd/m_26799/list.do

경제안보 Review - 메일링 서비스 신청

cesfa@mofa.go.kr

목차

I. 경제안보 분석

최용호 전문관

미국 상호·기본 관세 관련 국내 정치·법적 쟁점 분석

01

1. 배경: 삼권분립과 통상정책 권한
2. 美 대통령 비상권한법률의 주요 내용과 사법 쟁점
3. 美 의회의 견제 움직임
4. 분석 및 전망

II. 경제안보 현안

안수린 전문관

美 「AI 확산 규칙」 철회 및 AI 반도체 수출통제 동향

13

1. 美 AI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 변화
2. 평가 및 향후 전망

III. 경제안보 연구동향

이재원 선임전문관

「예정된 분열?: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한 미국과 EU의 대응」

18

* Salih Bora, Lovely, Mary E. and Simon, Luis. (2025.4.).

“Destined for Division? US and EU Responses to the Challenge of Chinese Overcapacity”.

CSDS Policy Brief. Center for Security, Diplomacy and Strategy, Vrije Universiteit Brussels (VUB).

1. 대중국 관세의 배경: 중국의 과잉생산
2. 중국의 비시장 과잉생산 문제
3. 미국과 EU의 상이한 접근
4. 결론: 미국과 EU의 협력 가능성

IV. EWS 공급망/에너지 동향

- 중국, 중국 희토류 수출 규제 관련 가격 동향
- EU,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종식 로드맵 발표
- 중국, 핵심광물 수출통제 관련 정책 추진 동향
- 미국, 정부 간 핵심광물 TF 법안 발의

미국 상호·기본관세 관련 국내 정치·법적 쟁점 분석

최용호 전문관

요약

■ 배경

- 트럼프 행정부가 통상권한법률이 아닌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과 같은 대통령 비상권한법률을 근거로 상호·기본관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통령의 적법한 통상 규제 권한 범위를 둘러싼 논쟁 부상

⇒ 관세 정책에 대한 미국 국내 제도적 제약 조건에 대한 이해 필요

■ 美 대통령 비상권한법률의 주요 내용과 사법 쟁점

- (국가비상사태법, NEA)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이를 위한 절차적 요건 규정
 - 美 의회의 합동결의안 의결로 ‘국가비상사태’ 종결 가능
- (국가비상경제권한법, IEEPA) 대통령이 외국에서 기원하는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다루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 IEEPA 상의 권한 행사 가능
 - (권한) 외국 정부 및 외국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산 관련 거래에 대한 규제
- IEEPA는 ▲국가안보 위협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을 인정하지만 관세 부과 권한을 명시하지 않으면서 법적 쟁점 부상

■ 美 의회의 견제 움직임

- 민주당 주도 + 공화당 일각 동참으로 대통령의 통상 권한 범위를 제한하는 입법 다수 추진 중

■ 분석 및 전망

- ▲美 의회의 교착상태 ▲사법 절차의 복잡성 등 고려 시, 당분간 행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상호·기본 관세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
 - 다만, 관세 정책에 대한 미국 내 반발이 거센 점 고려 시, 상호·기본 관세 정책의 장기 지속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 가능
- (입법) 관세 이슈의 쟁점화는 트럼프 행정부 및 공화당에 대한 미국 내 지지에 영향
- (사법) ▲비상사태 선포의 적법성 ▲관세 부과가 IEEPA 상 대통령의 권한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이 법적 쟁점이며 이 외에도 연방대법원 판사의 이념분포(보수6 vs. 진보3) 등이 사법심사의 향후 변수
 - 또한, 사법부가 원고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전국 단위의 효력 정지 명령을 내리게 되면 최종 판결 이전에 상호·기본 관세 정책이 중단될 가능성 주목

1. 배경: 삼권분립과 통상정책 권한

■ **美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등* 대통령 비상권한에 근거하여 상호·기본 관세 정책(2025.4.2.) 추진 → 대통령의 적법한 권한 범위를 둘러싼 논쟁 부상**

*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IEEPA) / National Emergencies Act(NEA)

● **美 헌법은 통상정책 권한을 美 연방의회에 부여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 행정부는 입법부가 법률을 통해 위임한 권한 범위 내에서만 통상정책 집행 가능(삼권분립)**

관세 정책 권한 관련 주요 美 헌법 조항

제1조 입법부

제1항(입법권) 이 헌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입법권은 합중국 의회에 속하며...

제8항(연방의회에 부여된 권한) 연방의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합중국의 채무를 지불하고, 공동 방위와 일반 복지를 위하여 조세, 관세(Duties), 공과금 및 소비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관세, 공과금 및 소비세는 합중국 전역을 통하여 통일적이어야 한다.
3. 외국과의, 주 상호간의 그리고 인디언 부족과의 통상을 규제한다(regulate commerce).

● **美 의회는 다양한 입법을 통해 행정부(대통령)에 무역 정책 권한을 위임 / 다만,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규정하여 해당 권한이 행사될 수 있는 범위를 한정***

*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美 의회는 필요에 따라 행정부에 일부 권한을 위임하면서도 다양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여 행정부 권한의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

법률	내용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 기반 수입 제한)	특정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 수입 제한
1974년 무역법 301조 (불공정 행위 대응)	외국의 행위로 ▲무역협정으로 성립된 미국의 권리가 부정 또는 ▲미국의 상거래가 불합리·차별적인 방식으로 제한되는 경우 수입 제한
1974년 무역법 122조 (국제 지급 문제)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급박한 달러 가치 하락 등 근본적 국제 지급 문제 발생 시 한시적으로 수입 제한
1930년 관세법 338조 (차별 행위 대응)	특정 방식으로 미국의 상거래에 차별적 대우를 하는 국가에 대한 수입 제한

※ 상기 표에 언급하지 않은 여타 다른 통상정책 근거에 대해서는 CRS 보고서(2025) 참조

- 상호·기본관세 정책 등*을 추진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상기 통상권한법률이 아닌 IEIPA**와 같은 비상권한법률 활용

* 마약 국경 유입 등을 근거로 시행한 對 중국·캐나다·멕시코 관세도 비상 권한 활용

** 국가 비상 상황에서 美 대통령에게 경제 전반을 규제할 권한 부여(상세 내용 후술)

- 비상권한법률을 근거로 한 행정명령을 활용함으로써 美 행정부는 통상권한법률의 실제적·절차적 제약 및 의회의 견제를 우회, ▲관세 대상국 ▲관세율 ▲협상 절차 등의 판단 및 결정에 대한 재량권 확보

- 그러나 IEIPA를 활용한 대통령의 통상 규제 권한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쟁* 부상

* ▲‘비상사태’ 선포의 적법성 ▲IEIPA에 대통령 통상 규제 권한 포함 여부 등이 쟁점

■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기본관세 정책에 대한 저항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통상정책 권한 범위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미국 내에서 부상 중

- (사법) 美 소매업계, 중소기업, 주(州) 정부(민주당 주도) 등은 IEIPA를 근거로 한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위헌·위법이라는 소송 제기

- (입법) 대통령 통상정책 권한을 제한하는 입법이 다수 추진 중 / 美 민주당이 주도하는 가운데 공화당 일각도 공감·동참하는 추세

- 단, ▲대통령 거부권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점한 美 의회 상황 등 고려 시, 실제 입법화 가능성은 낮은 상황

■ 관세 정책에 대한 미국 국내 제도적 제약 조건에 대한 이해 필요

- 입법을 통한 제한(비상사태 종료, 대통령 권한 제한 입법 등) ▲사법심사를 통한 제한(IEIPA 권한 범위에 대한 사법적 해석 등) 등 제도적 제약 가능성 검토 필요

2. 美 대통령 비상권한법률의 주요 내용과 사법 쟁점

■ 국가비상사태법 (National Emergencies Act, NEA)

- (내용)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 및 절차 규정

- (선포)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 선포 가능 / 단, 선포 즉시 의회 통보 의무(shall) / 여타 법령의 어떤 권한을 활용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명시 필요

- (종료) ▲대통령의 직접 선언 또는 ▲의회의 합동결의안(joint resolution) 입법화*를 통해 ‘국가비상사태’ 종료

*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신속·우선 심리 대상(필리버스터 등 지연 불가) / 양원 다수결로 통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 / 의회는 6개월마다 비상사태의 종료 여부 표결 의무

- (평가) NEA는 비상사태에 대한 실제적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절차적 요건만 규정* / 대통령의 재량권을 인정하면서도 의회가 이를 견제하는 구조

* 무엇이 비상사태인지에 대한 판단, 즉 ‘국가비상사태’의 실제적 요건은 IEIPA 등 별도의 권한을 부여한 개별 법률이 규율

- NEA는 의회가 ‘국가비상사태’를 종료할 권한을 명시하고 심리·표결 절차도 간소화하고 있지만,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다수결*을 이루기 어려운바, 입법을 통한 ‘국가비상사태’ 종료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상황

* Veto-proof majority,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이를 무력화하고 특정 법안을 입법화하기 위해서는 美 의회 상·하원 각각 재적 의원의 2/3 이상 찬성 필요

■ 국가비상경제권한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

- (내용)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후 포괄적으로 경제를 통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 위임

IEEPA의 주요 내용

■ IEEPA 상의 대통령 권한 행사 조건

- (실체 요건) ▲ 외국에서 기원하고 ▲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또는 경제에 대한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을 다루기 위해 ▲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경우, IEEPA 상의 권한 행사 가능

- 국가비상사태 선포의 근거가 되는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다루기 위해서만 IEEPA의 권한을 활용할 수 있으며, 다른 새로운 위협을 다루기 위한 권한 행사는 별도의 국가비상사태의 선포 필요

- (절차 요건) ▲ 국가비상사태 선포 · 종료 관련 NEA의 절차 적용 ▲ 대통령은 IEEPA의 권한을 행사할 때마다 즉시 의회에 보고*

* ▲ 권한 행사가 필요한 정황 ▲ 그런 정황이 국가안보에 대한 이례적 · 특별한 위협이라고 판단한 근거 ▲ 행사할 권한 및 조치의 내용 ▲ 그런 조치가 필요한 이유 ▲ 관련 조치를 취할 국가 및 그 이유

- 대통령은 의회와 정기적 협의 / 6개월에 1회 이상 후속 보고서 의회 제출

■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IEEPA의 권한

- (권한) 미국 관할권 내 대상에 대해 대통령은 다음의 권한 보유

① 국제금융 거래[△]에 대한 조사 · 규제 · 금지

* ▲ 외환 거래 ▲ 신용의 이전 · 지급 ▲ 통화 또는 증권의 수출입

② 외국 정부 및 외국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산 관련 거래[△]에 대한 규제^{**}

* 취득, 보유, 사용, 이전, 인출, 수송, 수입(importation), 수출(exportation) 등

** 조사, 규제(regulate), 무효화(nullify), 예방(prevent), 금지(prohibit), 지시 · 강제(direct and compel) 등

③ 적대국* 자산의 몰수

* 무력 교전의 상황에서 해당 주체가 미국에 대한 공격을 기획 · 승인 · 지원 · 수행했다고 대통령이 판단하는 경우

- (권한의 한계) 아래의 사항은 IEEPA의 대통령 규제 권한에 未 포함

① 경제적 가치가 수반되지 않는 우편, 전화 등 개인적 성격의 통신 활동

②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인도적 목적의 물품 기부 활동

③ 美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정보 및 정보 자료의 수출입

④ 개인의 여행 관련 경제적 거래

- (평가) 법 조문 상 IEEPA는 ‘국가비상사태’ 판단에 있어 대통령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경제 규제 권한도 광범위
 - IEEPA는 ‘이례적이고 특별한(unusual and extraordinary)’ 국가안보 위협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아 사법 쟁점 부상 / 이와 관련된 판단 자체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사법적 자제의 대상(대통령의 정치·외교적 판단에 대한 사법적 판단 자제)이 되는지도 쟁점
 - IEEPA는 광범위한 권한을 인정하지만 관세 부과 권한을 명시하지는 않는바, 관세의 부과가 과연 IEEPA가 부여하는 대통령 권한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쟁점

■ 사법 쟁점

- 트럼프 행정부의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 정책에 대한 무효화 소송이 미국 전역에 제기되어 아래와 같은 쟁점에 대한 사법심사가 진행 중(Khardori 2025.4.22.; Knauth and Brittain 2025; Willmer 2025)
 - ※ 최근에는 5개 美 중소기업이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V.O.S. Selections, Inc. v. Trump)에 대한 구두변론 실시(5.13)

<핵심 쟁점 및 주요 주장>

쟁점	원고측 주장	피고(행정부)측 주장
국가비상사태 선포의 사법심사 가능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심사 가능 ▲ IEEPA는 비상사태의 실제적 요건을 규정하므로 검토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심사 불가 ▲ 비상사태 선포는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 사법 자제 필요
국가비상사태 선포 요건 및 IEEPA 적용 가능성 충족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未 충족 ▲ 지속적인 무역 적자는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해당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충족, 대통령 판단 사항 ▲ 무역 적자는 국가안보 및 경제에 대한 실질적 위협
IEEPA 상 대통령 권한에 관세 부과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 부과 권한 未 포함 ▲ IEEPA에 명시적 규정 없음 ▲ 관세 부과는 법 취지와도 불합치 ▲ 설령 IEEPA에 관세 부과 권한이 포함됐을지라도, 특정 조건에 기반하지 않는 트럼프식 무차별적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는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 부과 권한 포함 ▲ IEEPA는 현재와 같은 비상 상태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경제를 규제할 광범위한 재량권 부여
헌법상 권력 분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헌, 대통령 권한 남용 ▲ 관세 부과는 헌법이 보장하는 입법부 고유의 권한 ▲ 입법부는 특정 한도를 정하지 않은 형태의 무제한적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 불가(nondelegation doctr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헌, 정당한 권한 행사 ▲ 입법부는 IEEPA 법률을 통해 비상사태 대통령의 경제 규제 권한 위임(관세 권한 포함)

● 원고측은 관세 부과 기간 동안 받을 피해를 고려, **행정부 조치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는 가처분 (injunctions)- 신청 제기**

* 본안 판결 전(前) 단계에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시키는 임시적 조치

- 일각에서는 전국 단위의 효력을 가지는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행정명령의 효력이 임시로 정지되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기본 관세 정책이 2025.6월 내에 중단될 가능성 제기 (Palmer 2025.5.12)

-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관세 부과를 지렛대로 여타 국가들과 협상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직접적 타격 예상

● 관세 무효화 소송과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연방대법원의 ‘美 전역 금지 명령(nationwide injunctions)’ 허용 여부, 즉 **가처분 결정의 효력 범위도 쟁점*** (Khardori 2025.5.1)

* “하급 연방지방법원이 전국 단위로 효력이 미치는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가?”가 쟁점이며, 이 논의는 이민 문제뿐 아니라 무역, 환경 등 여타 영역에도 영향

- (배경)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발표(1.20) 이후 여러 연방지방법원에서 전국 단위의 효력 중지 결정 → 트럼프 행정부는 동 결정의 효력을 소송을 제기한 주(州)와 개인(소송 당사자)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 제기 / 연방대법원에서 동 소송의 첫 구두변론 진행(5.15)

- (논쟁) (전국 단위 효력 반대론) 행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지나친 개입이며, 구체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 외에 타인에게까지 효력을 미치는 결정은 제한 필요 vs. (전국 단위 효력 찬성론) 대통령 행정명령의 영향이 광범위, 피해 범위도 전국적

- (영향) 연방대법원이 행정부 입장 수용 시 소송이 제기된 주(州) 또는 개별 소송 당사자에게만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적용될 가능성 → 이런 경우 피해 당사자들은 개별적으로 각각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행정부에 유리

3. 美 의회의 견제 움직임

■ (입법) 대통령 통상정책 권한을 제한하는 입법이 다수 추진 중

● 민주당은 관세 정책에 반발하며 대통령의 통상 권한을 제한하는 입법 추진

● 공화당 다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지지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지역구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 / 일부 의원들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입법 활동에 동참*

* 주로 농업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거나 중간선거 재선 출마를 앞둔 공화당 의원들 중심으로 비판 제기 / 예) 공화당 Rand Paul 의원(상원, 켄터키)은 대통령 단독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고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공개 비판

대통령의 통상 권한을 제한하는 주요 법안(2025.5.16. 기준)

■ 상호관세 부과를 위해 선포된 국가비상사태를 해제하는 합동결의안*

* A joint resolution terminating the national emergency declared to impose global tariffs (S.J.Res.49)

- (개요) 상원 / R.Wyden(민주), P.Rand(공화) 등 6인 발의
- (내용) 기본관세(10%) 및 국가별 추가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4월 2일에 선포한 ‘국가비상사태’의 종료
- (입법 동향) 상원 부결(찬성 49 對 반대 50)* / 공화당 이탈표 3표 발생

* 49 對 49 상황에서 Vance 부통령이 결정권을 행사함으로써 반대 50으로 최종 부결

■ 對캐나다 관세를 위한 선포된 국가비상사태를 해제하는 합동결의안*

* A joint resolution terminating the national emergency declared to impose duties on articles imported from Canada (S.J.Res.37)

- (개요) 상원 / T.Kaine(민주) 등 발의
- (내용)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2월 1일에 선포한 ‘국가비상사태’의 종료
- (입법 동향) 상원 통과(찬성 51 對 반대 48) / 하원 계류 중

■ 무역 검토 법안*

* Trade Review Act of 2025 (S.1272, H.R.2665)

- (개요) (상원) C.Grassley(공화), M.Cantwell(민주) 등 13인 발의 / (하원) D.Bacon(공화) 등 7인 발의*

* 공화당 의원은 상원 법안에 7인, 하원 법안에 4인 동참

- (내용) 대통령이 신규 관세 도입 시 의회의 명시적 승인 요구
- 관세 부과 후 행정부는 48시간 이내에 의회 통보 / 60일 이내에 의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관세 자동 종료
- (입법 동향) 상·하원 각각 계류 중

■ 불량 대통령 저지 법안*

* Stopping a Rogue President on Trade Act (H.R.2888)

- (개요) 하원 L.Sanchez(민주) 등 23인 발의*

* 하원 세입위원회 민주당 전원 포함 / 공화당 의원은 미참여

- (내용) ▲ 상호 · 기본 관세 행정명령 폐지 ▲ 對캐나다 · 멕시코 관세 행정명령 폐지 ▲ 신규 관세 부과 시 의회의 합동결의안(joint resolution)을 통한 승인 의무화

- (입법 동향) 하원 계류 중

■ 상호관세의 목표 검토 법안*

* Reviewing Economic and Protection Objectives for the Reciprocal Tariffs Act (H.R.3292)

- (개요) 하원 Y.Kim(공화), J.Hurd(공화) 발의*
- (내용) ▲ 대통령이 관세 조정을 시행하기 최소 48시간 전에 관보를 통해 사전 통보, 정책 목적 정당화 요구 ▲ 조치 후 7일 이내 의회 보고

- (입법 동향) 하원 계류 중

- Y.Kim 의원은 의회가 무역 정책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을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 다만,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언급

■ 중소기업 해방법안*

* Small Business Liberation Act (S.1593)

- (개요) 상원 E.Markey(민주), C.Schumer(민주) 발의
- (내용) 중소기업에 대해 행정부의 상호 · 기본 관세 면제
- (입법 동향) 상원 계류 중

■ 美 민주당은 공동서한 등을 통해 ▲가계 부담 급증 ▲인플레이션 ▲동맹관계 저해 등 트럼프 관세 정책의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며 비판, 행정부 압박 지속(Bolton 2025.5.16)

- 특히, 민주당은 美 농업, 의약품, 주택 가격, 중소기업 등 관세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내 집단을 특정하며 행정부 압박(Miller 2025)
 - 아울러, 사법부로 보내는 서한을 통해 입법부의 고유 권한인 무역 권한을 행정부가 위임받지 않은 형태로 남용하고 있다고 지속 강조
 - 일각에서는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관세 이슈를 지속 쟁점화하면 공화당은 농민, 노동자 계층으로부터 지지를 잃어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고 분석
 - 공개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저항하기 어려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사법부에서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Bolton 2025.4.16)

4. 분석 및 전망

■ ▲美 의회의 교착상태 ▲사법 절차의 복잡성 등 고려 시, 당분간 행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IEEPA를 활용한 상호·기본 관세 부과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

- 다만, 관세로 인해 미국 국내에 경제적 고통이 지속되고 이에 따라 각계각층의 반발 및 저항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고려 시, 상호·기본 관세 정책의 장기 지속성에 대해서는 의문 제기 가능

■ (입법부) ▲의석 분포(공화당 우위 단점정부 상황), ▲대통령 거부권 등 고려 시 신규 법안의 입법화는 어려우며 교착상태 예상

※ 美 의회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상·하원의 과반 동의 필요 / 그러나 상원은 필리버스터의 존재로 상원 통과를 위해서는 사실상 3/5 동의 필요 / 통과된 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재의결을 위해서는 상·하원 각각 재적 의원의 2/3 이상 찬성 필요

- ▲대통령 통상정책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 ▲대통령에게 새로운 통상정책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두 가지 모두 입법화가 어려운 상황

* 민주당이 주도하는 행정부 견제 움직임과 반대로 공화당 일각에서는 상호관세 부과 권한 위임 등 대통령의 권한을 확대하는 <상호관세법안> 논의 중

-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한 일방주의적 권한(unilateral presidential authority)을 행사하는 가운데, 美 의회는 입법을 통해 이를 실질적으로 막기 어려운바, 행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형세

- 다만, 민주당이 관세의 부정적 영향을 지속 쟁점화하면 트럼프 행정부 및 공화당에 대한 지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내년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역구 고통 장기화 시 의원들의 입장이 변화할 가능성도 주목 필요

- 공화당 내 다양한 이해관계가 행정부 정책 추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주목할 부분*

* 예컨대,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中 제외 상호관세 90일 유예 발표(4.9) 당시에도 Lindsey Graham 등 공화당 의원들과의 통화가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지적

■ (사법부) 사법심사 절차 고려 시, 단시일 내 최종 판결 도출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핵심 관건은 원고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사법부가 받아들일지 여부

- ▲하급 연방법원이 원고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전국 단위에 관세 정책의 효력 정지 명령을 내리고 ▲연방대법원이 전국 단위 금지 명령 효력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기본 관세 정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 주목

-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호·기본 관세 무효화’ 소송뿐 아니라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단 명령의 효력 범위’ 관련 심리도 주목 필요

-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의 무효화 소송은 ▲비상사태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 여부 ▲비상사태 선포의 적법성 ▲IEEPA에서 부여하는 대통령의 권한 범위 ▲IEEPA 법안 성안 당시 의회의 의도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 등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의거하여 최종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전망
- 관세 무효화 소송의 관할권 관련, 최근 몬태나에 이어 플로리다 연방법원도 美 국제무역법원 (CIT)으로 동 소송을 이관(5.20)했다는 사실에도 주목 필요*
- * CIT는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과 관련된 소송에 대해 관할권을 보유하는바, 관할권 판단을 위해서는 IEEPA에 관세 권한이 포함됐는지 여부 판단 필요 / 플로리다 법원은 IEEPA가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법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면서 CIT로 사건 이관 결정
- 상기 법률적 쟁점 외에도 연방대법원 판사의 이념분포(보수6 vs. 진보3) 등이 향후 사법심사의 변수

참고문헌

- 김동현. (2025.5.16.). “트럼프의 ‘출생시민권 금지’ 美 일부에선 허용되나…대법원 심리”. 『연합뉴스』 .
- 유지윤. (2024.6.28.). “미 행정부 관세정책의 국내법적 근거와 시사점”. 『KIEP 기초자료』 24-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은영. (2025.4.7.). “법적 분쟁 직면한 ‘트럼프 관세’, 쟁점은”. 『조선비즈』 .
- Bolton, Alexander. (2025.4.16.). Republicans quietly hope Supreme Court bails them out on Trump’s trade war. The Hill.
- Bolton, Alexander. (2025.5.16.). Democrats warn Trump tariffs harming national security interests. The Hill.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5.4.23.). Congressional and Presidential Authority to Impose Tariffs. CRS Report.
- Khardori, Ankush. (2025.4.22.). Are the Trump tariffs legal? Politico.
- Khardori, Ankush. (2025.5.1.). The Supreme Court Could Unleash Chaos on the Economy: Two big Trump court battles are about to collide. Politico.
- Knauth, Dietrich and Blake Brittain. (2025.5.14.). Small businesses press US trade court to block Trump tariffs. Reuters.
- Miller, Maya C. (2025.5.10.). Attacking Trump’s Tariffs, Democrats Focus on Small Business Struggles. The New York Times.
- Palmer, Doug. (2025.4.4.). Trump’s tariffs could face more than one legal challenge. Politico.
- Palmer, Doug. (2025.5.12.). How Trump’s trade war could end by June. Politico.
- Willmer, Sabrina. (2025.4.25.). Trump is Using Emergency Law to Impose Tariffs. Is That Legal?. Bloomberg.

저자 소개

최용호 | yhochoi22@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전문관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 주제는 국제정치경제, 기술패권경쟁, 미국 국내정치와 경제안보정책의 관계 등이다. 주요 연구로는 “미일 기술패권경쟁과 미국의 경제적 대응: 민군겸용기술을 둘러싼 안보 논쟁과 통상마찰”(이승주 편, 2020, 『미중 경쟁과 글로벌 거버넌스』),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전략”(경제안보리뷰, 23-7호), “틱톡 규제 동향 분석: 데이터 안보와 경제의 연계 가능성”(경제안보리뷰 23-16호), “미중 조선·해운 경쟁: 잠재적 경제안보 이슈의 부상”(경제안보리뷰, 24-8호), “美 대선 이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망”(경제안보리뷰, 24-19호) 등이 있다.

美 「AI 확산 규칙」 철회 및 AI 반도체 수출통제 동향

안수린 전문관

1. 美 AI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 변화

■ 美 행정부, 기존 AI 반도체 수출통제 지침인 ‘AI 확산 규칙(AI Diffusion Rule, 前 바이든 행정부 추진)’을 철회한다고 발표(5.13)

- 동 규칙(1.15. 발표)은 당초 美 시간 5.15.(목) 시행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사우디·카타르·UAE) 순방(5.13~16)을 앞두고 폐지
- 미측은 ▲美 혁신 저해 ▲美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부과 ▲2티어 국가*와의 외교 관계 훼손에 대한 우려를 배경으로 설명

* 동 규칙은 전 세계를 3개 티어로 구분 / 티어별로 상이한 수출통제 적용

- 1 티어 : 한국, 일본, 호주, NATO 회원국 등 → 수출 허가 없이 수출 가능

- 2 티어 : 티어1과 3에 속하지 않는 국가(사우디 등)로 총 연산력(Total Processing Power) 7.9억까지는 수출 시 승인 추정 원칙 적용

- 3 티어 : 중국, 북한, 러시아 등 美 상무부 수출관리규정(EAR) 상 무기금수국(D:5 국가그룹)으로 수출 전면 금지

- 기존 AI 확산 규칙을 대체할 새로운 규칙을 발표할 예정(“will issue a replacement rule”)이며, 동 관련 3가지 가이드라인도 발표(5.17)

※ ① 화웨이 Ascend 칩 등 中 고급연산용 직접회로(Integrated Circuit, IC) 사용에 따른 위험성(민감기술 유출, 中 군사적 활용 등)을 산업계에 경고

② 미국산 AI 칩이 中 AI 모델 학습 및 추론에 사용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잠재적 결과에 대해 일반 대중에게 경고(warning)

③ 美 기업들이 美 AI 반도체·기술의 中 등 우회 수출 및 제3국 경유 전용(轉用)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체 공급망 보호 방안 마련

■ 한편, 中 화웨이 Ascend 반도체에 대해 美 및 美 외 기업·기관이 전 세계 어디서든 사용시 美 수출통제 위반이라는 지침 발표(5.13)

* 화웨이 Ascend 칩(910B, 910C 등)은 엔디비아(A100, H100)와 경쟁하기 위해 개발된 고성능 AI 프로세서로 가성비 높은 훈련·추론 등 AI 성능 시현

- 화웨이 Ascend 반도체를 美 소프트웨어·기술·장비를 활용해 만들어진 것으로 간주, 수출관리규정 (EAR) 일반금지 조항(GP 10)에 따라 美 기술·장비로 생산된 제품을 美 정부 허가 없이 사용하는 행위 금지
 - ※ 상무부 BIS 관계자, “Ascend 반도체는 美 소프트웨어·기술로 설계, 또는 美 소프트웨어·기술로 생산된 반도체 제조 장비로 제조, 또는 둘 다 해당” 언급
- 美 수출관리규정(EAR) 제734.9조 ‘Foreign Direct Product Rule(FDPR)’에 따라 외국(개인·단체)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

2. 평가 및 향후 전망

■ (美) 트럼프 행정부, 中 AI 기술 발전·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中-제3국 간 AI 협력을 견제하고 對中 AI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예상

- 美 중심 AI 생태계 구축 및 상호이익에 기반하여 동맹·우호국 대상 AI 반도체·기술 파트너십 확대 및 시현 전망
 - 특히, 최근 중동 순방(5.13-16)을 통해(中 정부가 그간 AI 관련 협력을 강화해 온) 사우디·UAE 정부와 AI 반도체 공급망 및 인프라 협력 강화 발표
 - ※ (사우디) ▲ 사우디 DataVolt社, 對美 AI 인프라 투자(200억불), ▲ NVIDIA社, 사우디 AI 기업(Humain)에 AI 반도체 1.8만개 수출 발표(100억불)
 - ※ (UAE) 5GW 규모 미-UAE 인공지능 클러스터 설립 포함 AI 파트너십 체결
 - 이번 순방 계기 美-사우디 간 AI 기술 포괄 ‘전략적 경제협력동반자 관계’ 구축이 기존 中-사우디간 AI 협력 동향에 미칠 영향 관찰 필요
 - ※ 中 SenseTime社, 사우디 AI 기업(SCAI)과 7.7억불 AI 합작 계약(2020.9월) / 中 Baidu社, 사우디관광청과 AI 공동개발(2024.7월)

■ (中) 미측이 발표한 화웨이 Ascend AI 반도체 사용 금지 지침에 대해 강력히 반발, 미측의 일방적 수출통제 조치에 대해 즉각 철회 요구

- ※ 상무부 허용젠 대변인, “미국이 수출통제 조치를 남용해 중국 반도체 산업에 제한을 가한 것은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글로벌 반도체 산업공급망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언급(5.16)
- 美 수출통제 강화에 대응, AI 반도체에 사용되는 주 원료(희토류, 갈륨 등)에 대한 對美 수출통제가 다시 심화될 가능성 예의주시 필요
- 화웨이, 무어스레드 등 주요 AI 기업 중심으로 AI 개발을 가속화하고, 중동(UAE, 사우디), 동남아(말레이·베트남) 기술 협력 지속 강화 전망

■ (우리에의 영향) 엔비디아에 고성능 HBM을 독점적으로 공급 중인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의 對美 진출 및 협력에 있어 수혜 가능성

- AI 반도체 관련 기술력과 생산역량을 바탕으로 美 및 중동 주요국과의 협력 기회를 적극 모색하고, 반도체 공급망 재편 및 관련 규정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 필요
- 우리 AI 반도체 관련 기업은 현재까지 화웨이 AI 칩 未사용 / 엔비디아, AMD 등 美 기업 생산 제품에 의존 중 ⇒ AI 반도체 분야 對美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 산업 발전 기회도 모색
 - ※ 한국 AI 칩 분야 업계는 현재 일부 스타트업(퓨리오사AI, 리벨리온 등) 중심으로 AI 칩 분야 자체 설계 역량은 높지 않은 상황
 - 現 국내 보유 AI 가속기 약 1만개 추정(美·中과 비교시 약 1/30~1/100 수준)

참고문헌

- Bloomberg. (2025.5.15.), Trump's Rush to Cut AI Deals in Saudi Arabia and UAE Opens Rift With China Hawks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5-05-15/trump-s-rush-to-cut-ai-deals-in-saudi-arabia-and-uae-opens-rift-with-china-hawks>
- Financial Times. (2025.5.14.) US warns against using Huawei chips 'anywhere in the world'
<https://www.ft.com/content/2033b5b3-974d-4d40-8498-1c46d3a8db79>
- Forbes. (2025.5.15.) U.S. Will Build Massive AI Data Center In Abu Dhabi: See the List of Deals Trump Announced in the Middle East
<https://www.forbes.com/sites/saradorn/2025/05/15/us-will-build-massive-ai-data-center-in-abu-dhabi-see-the-list-of-deals-trump-announced-in-the-middle-east/>
- The White House. (2025.5.13.),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Secures Historic \$600 Billion Investment Commitment in Saudi Arabia
- 나경연. (2025.5.15.). 미국 반도체 '중동 특수'... 한국도 덕 보나. 국민일보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47295753>
- 미국 상무부(BIS) 보도자료. (2025.5.13.). Department of Commerce Rescinds Biden-Era Artificial Intelligence Diffusion Rule, Strengthens Chip-Related Export Controls
<https://www.bis.gov/press-release/department-commerce-rescinds-biden-era-artificial-intelligence-diffusion-rule-strengthens-chip-related>
- 미국 연방관보(Code of Federal Regulations). Foreign Direct Product (FDP) Rules
- 변희원. (2024.6.3.), 美가 막는데... 사우디, 中 AI 스타트업에 4억달러 투자,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4/06/03/GSF3PJYCGRCKBFNYXW6D4JTBGA/
- 유호윤. (2025.5.15.). 중국 “미국 ‘화웨이 칩 통제’ 시정해야”...대응 조치 시사.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54769>
- 이상덕 & 정호준. (2025.1.30.). 메타 보유 AI가속기 35만개 vs 韓 2천개 ... AI전쟁에 실탄이 없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business/11229009>
- 장은현. (2024.7.). AI 반도체 기술 및 산업 동향. KDB산업은행 산은조사월보 제824호
<file:///C:/Users/USER/Downloads/AI%20%EB%B0%98%EB%8F%84%EC%B2%B4%20%EA%B8%B0%EC%88%A0%20%EB%B0%8F%20%EC%82%B0%EC%97%85%20%EB%8F%99%ED%96%A5.pdf>
- 한경제. (2025.5.8.). 'AI칩 수출 규제' 다시 짜는 트럼프...바이든式 등급제 폐기.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50807701>

저자 소개

안수린 | srann22@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전문관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 주제는 국제정치, 미중 기술 경쟁, 신형안보기술, 수출통제, 경제제재 등이다. 주요 연구로는 “미국의 대북제재 I & II편,” “미국 상무부의 (AI) 반도체 및 관련 장비 수출통제,” “미국의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위협 인식,” “미국의 수출통제 효과성 및 역효과” 등이 있다.

「예정된 분열?: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한 미국과 EU의 대응」

※ 원문: Salih Bora, Lovely, Mary E. and Simon, Luis. (2025.4.). “Destined for Division? US and EU Responses to the Challenge of Chinese Overcapacity”. *CSDS Policy Brief*. Center for Security, Diplomacy and Strategy, Vrije Universiteit Brussels (VUB).

이재원 선임전문관

1. 대중국 관세의 배경: 중국의 과잉생산

■ 미국의 대중국 관세 배경에는 중국의 과잉생산(overcapacity)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며, 근본적 원인은 중국의 경제 모델과 세계 경제 질서 간 충돌에서 기인

● 중국의 과잉생산 및 막대한 수출에 대한 美-EU의 우려가 심화되어 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145% 부과는 이를 반영한 극단적 사례

- 2024년 중국의 전 세계 대상 무역 흑자는 9,920억 달러를 기록('23년 대비 21% 증가)

● 과잉생산에 따른 무역 불균형은 근본적으로 ▲중국의 국가 주도 자본주의(party-state capitalism)와 ▲세계 경제 질서의 근간인 자유 시장 원칙 간 충돌이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

-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래 전례 없는 경제성장을 이뤘으나, 지식재산권 및 산업 보조금 관련 다자간 규칙 다수를 위반하는 등 글로벌 무역 시스템으로의 편입은 부진

■ 현재 미국과 EU는 중국의 과잉생산이 경제안보를 위협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으나, 그 대응에 있어서는 상이한 접근 방식을 채택

● 공통적으로 미국과 EU는 중국의 성공적인 수출 성과가 시장에서의 비교 우위가 아닌 국가보조금에 기반한다고 평가하며, 경제·안보 필수 분야에서 중국과 충돌

-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SCM)은 중국의 보조금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는 데 실패

● 개별적 대응으로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이전부터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일방주의를 채택하였으나, EU는 여전히 글로벌 무역 규칙을 준수하려는 입장

- 미국과 EU 간 상이한 접근은 과잉생산 대응에 효과적이지 않으며* 협력 방안 모색 필요

* 태양광 패널 사례는 미국과 EU의 조율되지 않은 대응으로 중국이 전 세계 태양광 시장 점유율을 1%('01년) → 59%('10년) → 75~95%(현재) 증대시키면서 세계 시장을 분할·정복(divide and conquer)할 수 있음을 제시 / 이 과정에서 미국은 24~36% 관세 부과, EU는 11.8% 관세 부과 후 수입 할당량에 대한 관세 면제 합의

2. 중국의 비시장 과잉생산 문제

- 중국이 불공정한 국가개입으로 첨단 산업(반도체, 인공지능, 전기차 등)을 육성한다는 공통된 믿음이 있지만, 이러한 “비시장 과잉생산(nonmarket overcapacity)”에 대한 합의된 개념은 부재
 - (비시장 행위) 서방 국가 간 정부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한 규칙을 개혁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시장 행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공통된 이해는 부족
 - WTO는 보조금을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재정적 기여”가 수혜자에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국영 기업에 대한 보조금 ▲정부와 민간 영역의 불분명한 구분 등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데 불충분한 상황
 - * 2017년 미국, EU, 일본이 WTO 체제 안에서 중국의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2020년 3자 공동성명을 통해 금지 대상 보조금을 추가 제안하였으나 ▲미국은 신속하고 강력한 규율을 선호하는 반면 EU는 WTO 내 합의 및 절차적 정당성 중시 ▲보조금 통보 의무 강화 및 불이행에 대해 미국은 강한 제재, EU 및 일본은 인센티브 제공 등 유연성 발휘 등 이견도 존재
 - (과잉생산) 정부의 개입으로 발생한 수출 증대를 정의하려는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중국은 이를 반박하면서 ▲규모의 경제 달성 ▲기술 혁신 ▲산업 고도화 ▲내수 시장 확대 ▲생산 효율성 제고 등을 주요 요인으로 제시
 - 과잉생산의 핵심 지표로 산업의 생산시설 가동률이 제시되는 한편, 현재 국내 시장 가격 수준에서 내수로 흡수될 수 없는 초과 생산량으로도 정의
 - 다만, 생산시설 가동률은 경기 순환 및 계절 요인 등 다양한 원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시장 가격을 하락시킬 정도의 공급 증가는 규모의 경제 달성 등 다른 조건에서도 발생 가능
- 중국의 과잉생산 원인에 대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무역 불균형이 악화되면서 미국과 EU는 중국의 국가 주도 경제성장 모델을 원인으로 지목
 -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래 중국의 내수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수출 비중이 장기간 감소하였으나, 2017년부터 중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제조업 수출 비중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
 - 중국의 과잉 재고와 이윤 감소, 수출 급증 등을 검토한 연구는 중국의 수출 증가의 주된 원인은 해외 수요 증가가 아닌 국내 공급 확대라고 결론
 -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 행정부와 EU 집행위는 중국의 당-국가 주도 자본주의(party-state capitalism) 성장 모델이 비시장 과잉생산 및 수출 급증을 초래한다는데 동의
 - 중국의 세계 경제 편입이 미국과 EU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는 비난이 국내 정치적 분열을 일으키고 있지만, 향후 신흥 산업 부문에서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한 산업 정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력히 지지하는 국내적 여건 형성

3. 미국과 EU의 상이한 접근

■ 미국과 EU는 중국산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 정책을 확대하는 등 유사한 조치를 취하면서도 WTO 규칙 준수에 대해서는 다르게 접근

-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시작한 이래 관세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맞서는 핵심 수단이 되었으나, EU와의 정책 조율 없는 일방적 추진 및 EU에 대한 관세 부과로 양국 무역 관계에 적대감 발생

*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근거로 EU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 철강 25%, 알루미늄 10% 관세를 부과했으며, 미-EU 간 자유무역협정을 논의하던 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도 사실상 폐기

- EU는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전제를 두지만, 미국은 4월 2일 해방의 날에 부과된 상호 관세 이전부터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점진적으로 제거해 왔다는 점에서 미국과 EU의 공조에 중대한 분열 관찰
- (전기차 관세) 예컨대 미국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면서 중국산 전기차 관세 100% 부과 및 미국 내 커넥티드 카에 대한 중국산 기술 사용 금지 등 추진
 -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35~45% 상계 관세를 부과하면서도 공정한 경쟁의 장을 형성하기 위해 EU 시장 접근을 허용하고 중국산 기술의 역내 이전을 위한 EU 공급망 접근도 허용
- (산업정책) 미국은 전기차 분야에서 중국의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시행하고 EU 등 해외 생산자보다 미국 생산자에게 유리한 보조금과 규칙 적용
 - EU는 기존에 역내 단일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산업 정책을 제한해 왔으나, 유럽의 경쟁력 약화가 실존적 위협으로 인식되고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경제 질서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정책 수단*을 계속 마련할 전망
 - * ▲기업에 대규모 공적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유럽공동이익프로젝트(ICPEI) 분야 확대 ▲EU 회원국이 집행위에 사전 통보 없이 국가보조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반블록면제규정(GBER)에 재생 에너지 및 친환경 모빌리티 추가 ▲러-우 전쟁 시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기업을 지원하던 조치를 미국 IRA 이후 임시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CTF)로 확대 · 연장
- (WTO 준수 문제) 미국은 WTO를 통해 중국의 과잉생산 및 시장 개방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중국의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악용을 막기 위해 WTO 상소기구 위원들의 신규 임명을 차단
 - 반면 EU는 미국의 일방주의적 대응 방식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중국을 포함한 다른 WTO 회원국들과 함께 임시적인 상소기구로서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약정(MPIA)를 도입

4. 결론: 미국과 EU의 협력 가능성

- 단기적으로 미국과 EU의 협력 전망은 밝지 않으며, 악화되는 양자 관계는 개별적인 산업 정책 강화 및 무역 왜곡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 존재
 - 미국의 대중 관세 등 일방적 조치는 중국을 내수 확대 성장 모델로 유도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중국이 국가안보와 자립 달성을 추구할 명분을 제공
 - 미국이 빠진 EU의 독자적 접근은 회원국 간 분열을 초래할 위험도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EU는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포함하는 무역기술위원회(TTC) 등을 통한 대중국 대응을 선호 / 단, 미-EU 간 협력 가능성은 낮은 상황
- 당분간 EU는 중국과 대타협(grand bargain)을 검토하되, 중국의 과잉생산이 타국에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한국, 일본 등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포괄적 방안 모색 필요
 - 대타협의 한 방안으로 중국산 주요 품목 수출 제한 및 중국의 EU 역내 투자 및 기술 이전 유도를 고려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유럽 회원국의 단합이 긴요
 - 다만 중국의 과잉생산뿐만 아니라 러-우 전쟁 및 인태 지역 내 중국의 공세 강화로 인해 중국 위협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였으며, 이 때문에 협력을 위해서는 중국의 보조금 사용에 대응하는 더 엄격한 규제와 집행력 강화가 요구되는 어려운 상황
 - 대안으로 중국의 과잉생산이 타국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한국,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과 협력 추진
 - EU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거나 신규 무역협정을 모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미국의 동맹국들도 보호주의적인 미국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고 중국에 대항하는 카드도 확보 가능
-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EU의 경제 관계 악화를 극복하면서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려는 노력 필요
 -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은 미국과 EU의 무역 투자 관계를 구속하는 유일한 틀인 WTO 체제가 악화하는 상황은 EU에 큰 위험 요소
 - 미-유럽 간 무역 마찰이 심화할 때 중국은 EU 회원국을 갈라놓으며(wedge) 단합을 방해할 수 있고, 결국 미-중-EU 간 블록화는 EU라는 단일 시장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 존재
 - EU가 미국 동맹 네트워크 내 유사입장국과 협력해 시스템 개혁을 시작해야 하며, 동시에 장기적인 미-EU 협력 가치를 고려하면서 분열을 초래하는 미국의 조치 속에서도 소통 경로는 반드시 유지.

저자 소개

이재원 | jaewonlee@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선임전문관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 주제는 미중 경쟁, 기술 동맹, 경제제재와 수출통제이다. 주요 논문으로 “미중 경쟁 시기의 동맹 기반 반도체 수출통제.” 『국제지역연구』 33, no.3 (2024), “보장과 통제: 1987년 수출통제 양해각서로 본 한미동맹의 교환 메커니즘.” 『한국과국제정치』 37, no.3 (2021)이 있다.

EWS 공급망/에너지 관련 모니터링 결과

(기간: 2025.4.30.~2025.5.14.)

※ 외교부는 핵심품목들의 글로벌 공급망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 EWS)을 운영 중이며 경제안보외교센터에서 별도 취합한 경제안보 관련 해외 동향을 종합하여 주요 동향 및 표로 정리

■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 영향으로 희토류 금속 가격 사상 최고치 기록

- (개요) 중국의 희토류 7종* 관련 33개 품목의 수출통제 조치 시행(4.4)에 따라, 글로벌 희토류 금속 가격 지속 상승세

* 경희토류 1종(사마륨), 중희토류 6종(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 5.1일 유럽의 디스프로슘 가격은 4월 초 대비 약 2배 상승(850달러/kg), 테르븀 가격도 약 3배 상승(965달러/kg → 3천 달러/kg)

※ 디스프로슘과 테르븀은 전기차, 스마트폰, 가전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 영구자석에 첨가

- (전망) 중희토류 가격상승 추세 장기화시 관련 산업(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생산 비용 상승 불가피

※ 대부분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영구자석 비축 물량은 2-3개월로 추정(FT, 4.20)

- 관련하여 중국 언론은 산업 내 수요 확대 및 수급 불안 요인*에 따라 중희토류 가격이 중장기적으로 지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中國能源報, 5.5)

* ▲ 전기차, 로봇 수요증가에 따른 중희토류 수요 확대 ▲ 미얀마 내 정세 불안정에 따른 중국의 미얀마 중희토류 원광 수입 감소 등

■ EU 집행위,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종식을 위한 로드맵* 발표(5.6.)

* Roadmap towards ending Russian energy imports(COM(2025) 440)

- (개요) 2027년까지 러시아산 에너지(석유, 가스, 원자력) 수입을 단계적으로 철회

- (주요 내용) ▲ 러시아 가스 공급업체와 신규 계약 및 기존 현물계약에 따른 수입 전면 금지 (~2025년) ▲ 모든 러시아산 가스(LNG, PNG 포함) 수입 제한(~2027년) ▲ 러시아산 농축우라늄 수입에 대한 무역 조치 제안

- (전망) EU 집행위는 6월 동 로드맵 실행을 위한 입법안 제출 예정

※ 단, EU 회원국 간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상이한바, 향후 입법 과정에서 회원국 간 이견 조율에 난항 전망 / 법안 통과를 위해 EU회원국 55%+EU인구 65% 찬성 필요

■ 中 정부, 전략 광물 수출 관리·통제 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5.9 / 5.12)

- (개요) 中 국가수출통제조정기구, 상무부·해관총서 등 10개 중앙부처 및 지방 정부 주관부서 (내몽골·장시 등 7개 省)와 전략광물 수출 관리 회의 개최

※ 전략광물 밀수출 단속 특별행동 현장 회의(5.9) / 전략광물 수출 산업망 관리·통제 업무 회의(5.12)

- 관련하여 中 상무부는 대변인 질의답변 자료*를 통해 전략광물 수출에 대한 전주기 관리·통제 필요성 언급**(5.14)

* (질의) 최근 국가수출통제조정기구 전략광물 수출 관리·통제 강화 업무 추진의 배경 및 계획

** “전략광물 전주기에 있어서 관리·통제가 이루어져야 불법적인 외부 유출 차단 가능... 관련 지방 주관부서는 관할지역 내 관련 기업의 등록 및 장부 작성을 진행하고, 정책설명회, 수출리스크 경보, 감독 점검 등의 활동을 지속할 필요”(5.14)

● (전망) 핵심광물 수입시 중국 정부의 관련 규정 감독 강화 가능성 불배제

- 한편, 일각에서는 미·중 간 관세 관련 합의(5.12) 이후 中 정부의 핵심 광물(희토류 등) 수출통제 조치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바, 관련 동향 지속 모니터링 필요*

* 외신은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 관련 중국 3대 영구자석 기업이 수출 허가를 획득하고 북미 및 EU향 선적을 시작했다고 보도(Caixin, 5.15)

■ Jay Obernolte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 「정부 간 핵심광물 태스크포스 법안 (Intergovernmental Critical Minerals Task Force Act)」 발의(5.6)

※ 118대 의회에서 동일 법안 상원 통과(‘24.9.18) / 119대 의회에서 상·하원에서 초당적으로 재발의

● (주요 내용) ▲대통령 직속 TF 구성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 등에 대한 핵심광물 의존도 및 국가안보 위협 분석 ▲NATO, QUAD, 아브라함 협정국 등 동맹·파트너국간 협력 강화 등

- (전망) 핵심광물 분야의 양당 간 공감대 고려시 법제화 가능성 상존

■ EWS 공급망

국가	일자	내용
중국	5.5.	[희토류]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4.4)로 유럽 디스프로슘·테르븀 가격 급등
	5.8.	[중러관계] 시진핑 주석-푸틴 대통령,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 채택 :(주요내용) ▲양국 무역의 안정적 발전과 투자 촉진 ▲군사·군사기술 협력 강화 ▲포괄적 에너지 파트너십 강화 ▲은행간 협력 강화 ▲각국 통화 결제 확대 등
	5.9.	[광물] 전략 광물의 밀수출 단속 관련 회의 개최 : 허위 신고 및 은폐, 위장, 밀수, 제3국을 통한 재수출 등의 단속 필요성 강조
	5.9.	[가공무역] 보세 구역 내 가공무역 등 관련 조치 발표
	5.12.	[미중관계] 中-美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 :(주요 내용) ▲4.2. 이래 추가된 관세 취소 및 24% 90일 유예 ▲4.2. 이래 추가된 중국의 대미 비관세 조치 잠정 중단 또는 해제 ▲경제·무역 관계 논의를 지속할 수 있는 메커니즘 수립
	5.12.	[광물] 전략광물 수출 산업망 관리·통제 업무회의 개최
	5.12.	[안보] 국무원, 「신시대 중국 국가안전(안보)」 백서 발표 :(주요 내용) ▲총체적 국가안보관의 실천 성과 소개 ▲앞으로의 방향 제시

국가	일자	내용
중국	5.13.	[미중관계] 대미 관세 인하 조치 등 공식 발표
	5.14.	[미중관계] 中-美 경제·무역 공동성명에 따른 대미 관세 인하 조치 시행
	5.14.	[미중관계] 상무부, 대미 비관세조치 잠정 중단 발표 :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17개), 이중용도 품목 수출 금지 기업(28개)에 대한 제한 조치 중단
미국	4.29.	[AI]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국가 AI 연구개발 전략계획’ 개정 관련 의견수렴 실시
	4.29.	[방산] 국무부, 우크라이나 방위 물자 판매 승인 對의회 통보 : 5,000만 불 이상 규모 방위 물자 및 방위 서비스의 對우크라이나 수출 허가
	4.30.	[지재권] 무역대표부(USTR), 인도를 지식재산권(IP) ‘우선 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에 포함
	4.30.	[광물] 미국-우크라이나 재건투자기금(Reconstruction Investment Fund) 설립 합의 발표 및 미-우 ‘광물협정’ 체결
	4.30.	[의회] 상원, 국가긴급사태 종료 결의안(S.J.Res.49) 표결 진행 : 찬성 49 對 반대 49 동수로 부결* * Vance 부통령(상원의장) 결정권 행사로 추후 결의안 재상정 가능성 봉쇄
	4.30.	[관세]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트럼프 행정부에 중소기업 대상 관세 면제 절차 요청 서한 발송
	4.30.	[선박] Mark Kelly 상원의원(민주/애리조나), SHIPS for America Act 상·하원 재발의 발표 : (주요 내용) ▲백악관 해양안보보좌관 및 해양안보위원회 신설 ▲해양안보신탁기금 출범 ▲전략상단 250척 신규 건조 등
	5.2.	[관세] 중국발 저가(800불 이하) 배송품에 대한 면세 적용 종료
	5.4.	[관세] 트럼프 대통령, 외국에서 제작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영화에 대한 100% 관세 부과 절차 게시 승인 발표
	5.5.	[관세] 상원, 중소기업에 대한 상호·기본 관세 면제 법안* 발의 * Small Business Liberation Act(S.1593)
	5.5.	[의약품] 트럼프 대통령, 미국내 필수 의약품 생산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조치 행정명령 (Regulatory Relief to Promote Domestic Production of Critical Medicines) 서명
	5.5.	[관세] 트럼프 대통령,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발표 예고 및 반도체에 대한 관세 도입 시사
	5.5.	[IRA] Raul Ruiz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 핵심광물 제조 지원법안* 발의 : (주요 내용)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45X) 수혜 요건 강화 * Critical Minerals and Manufacturing Support Act(H.R.3200) / 초당적 발의
	5.5.	[디지털] Carol Miller 하원의원(공화/WV), 韓-美 디지털 무역 집행법안* 재발의 : (주요 내용) 한국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법을 입법하여 미국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USTR에 WTO 제소 및 301조 조사 등 조치 의무화 * United States-Republic of Korea Digital Trade Enforcement Act
	5.6.	[의약품] 식품의약청(FDA), 해외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 확대 방침 발표
5.6.	[핵심광물] Jay Obernolte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 정부간 핵심광물 태스크포스법안 (Intergovernmental Critical Minerals Task Force Act) 발의 : (주요 내용) ▲대통령 직속 TF팀 구성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 등에 대한 핵심광물 의존도 및 국가안보 위협 분석 등	

국가	일자	내용
미국	5.6.	[무역] 미국의 중국산 상품 수입 비중 20년만 최저치 기록(2025년 1분기 기준) : 미국 중국산 상품 수입액 1,027억 달러, 전체 상품 중 중국산 비중 11% 차지
	5.6.	[협정] Navarro 백악관 무역·제조선임고문, 무역협정이 우선 체결될 국가로 영국 또는 인도 언급
	5.6.	[핵심광물] 에너지부, 사우디 산업광물자원부와 광업 및 광물 자원 분야 협력에 대한 광물협정 논의 착수
	5.7.	[AI] 트럼프 행정부, AI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diffusion rule) 철회 계획 발표
	5.7.	[비자] 美 하원, H-1B 비자 국내 갱신 허용 유지 관련 국무장관 앞 서한 송부 : (주요 내용) 'H-1B 美 국내 갱신 2024년 시범(pilot) 프로그램' 공식화·확장 요청
	5.8.	[협정] 트럼프 대통령, 美·英 무역협정* 타결 발표 * (주요 내용) ▲영국 시장에 대한 미국산 소고기, 에탄올, 농산물, 화학품, 기계류 등의 시장 접근 확대 ▲영국산 차 연간 10만대 수입에 대한 10% 저율할당관세 부여 ▲10% 기본관세 유지 ▲철강·알루미늄 부문 232조 관세 대체 조치 협상 개시 합의 ▲영국산 항공우주부품 무관세 적용 등
	5.8.	[관세] Bernie Moreno 상원의원(공화/오하이오), 상무부에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확대 적용 요청 :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를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등 철강이 많이 사용되는 가전제품(steel-intensive appliance)에도 적용 제안
	5.8.	[석유] 재무부·국무부, 이란산 석유 수입 중 기업 등에 대한 제재 발표
	5.8.	[가상화폐] 상원, 연방정부 차원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 부결 : (주요 내용) ▲허가된 기관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한 ▲1대1 지급준비금 유지 의무 및 재담보설정 금지 등 발행 요건 적용 등 *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GENIUS Act)
	5.8.	[협정] 백악관, 美·英 경제번영협정(EPD) 타결 및 일반조항 발표 : (주요 내용) ▲관세 ▲비관세 장벽 ▲디지털 무역 확대 ▲경제안보 협력 및 동조(alignment) 강화 ▲상업적 고려 및 기회 ▲기타 사항 등
	5.9.	[항공] 트럼프 대통령, 상업용 항공기 및 제트엔진과 그 부품에 대한 232조 국가안보조사 관련 의견 제출 요청 공고에 대한 사전 공개 열람문서 게시
	5.9.	[투자] 재무부, CFIUS 신속심사절차(fast track process) 신설 발표
	5.12.	[관세] 백악관, 美·中 관세 합의 관련 Joint Statement 및 Fact Sheet 발표 : 양국이 현재 상호 부과하고 있는 관세에서 115% 차감(5.14~) * ▲(美→中) 145%→30% ▲(中→美) 125%→10% / 90일간 관세 인하 합의
	5.12.	[의약품] 트럼프 대통령, 미국 의약품 가격 인하를 위한 행정명령* 서명 * Delivering Most-Favored Nation Prescription Drug Pricing To American Patients
	5.12.	[제재] 국무부, 이란 핵 연구·개발 관여자에 대한 신규 제재 발표 : 이란 국방혁신·연구기구(SPND) 유관 개인 3인 및 기업 1곳에 제재 부과
	5.13.	[협정] 美-사우디, 전략적 경제동반자 협정 체결 : (주요 내용) ▲양국 간 6천억 달러(약 850조원) 규모의 對미 투자 및 對사우디 수출 ▲Si기술·인프라, 에너지, 핵심광물, 우주, 항공, 국방·안보등 경제안보 협력 강화 합의
	5.14.	[협정] 美-카타르, 안보-경제 패키지 합의서 서명 발표 : (주요 내용) ▲양국 간 1조 2천억 달러(약 1690조원) 규모의 對미 투자 및 對카타르 수출 ▲양자컴퓨터 기술·인프라, 에너지, 항공, 제조업, 방산 등 경제안보 협력 강화 합의

국가	일자	내용
일본	5.1.	[관세] 2차 日-美 관세 협상 실시
	5.8.	[조선] 관세 정책으로 인해 조선업 이익 하락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화물 이동 움직임 둔화 등에 기인
	5.8.	[경제] 제6회 日-EU 고위급 경제대화 개최 * 참석자 : (日) 아와야 외무대신, 무토 경산대신 / (EU) 셰프초비치 무역 및 경제안보 커미셔너
EU	4.25.	[AI] 미국 주EU 대표부, 범용 인공지능 실천강령(General-Purpose AI Code of Practice)에 대한 반대 서한 제출 : ‘지나치게 광범위한 보고 의무(overly broad reporting requirements)’ 등에 반대 우려
	5.8.	[관세] 집행위,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한 추가 보복조치(안) 공개 : (주요 내용) ▲공산품, 농산물 등 추가 950억 유로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부과 ▲철강 스크랩, 알루미늄 스크랩, 화학 원료 등 총 44억 유로 규모의 대미 수출품 5종류에 수출제한 검토
대만	4.28.	[AI] 대만 AI 서버 제조업체 Inventec社, 8,500만 달러 美 텍사스 투자 발표 : 올해 하반기부터 AI 서버 美 현지 생산 가능 전망
네덜란드	5.7.	[반도체] 아이트호벤 시당국, ASML의 아이트호벤 지역 내 확장과 관련 도시개발예비계획 (Preliminary Design Urban Development Plan) 발표
독일	5.3.	[희토류] 산업계, 중국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 인한 생산 차질 우려
	5.7.	[자동차] 중국 매출 부진으로 BMW 2025년 1분기 순이익, 22억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26.4% 감소
핀란드	4.24.	[양자] 노동경제부, 2025-2035 양자 기술 전략 발표
루마니아	5.2.	[비자] 美 국토안보부, 루마니아의 비자면제프로그램(WVP) 가입국 지정 철회
	5.8.	[환율] 론(Ron)-유로(Euro) 환율 사상 최고치(1유로 당 5.12론) 기록
브라질	5.1.	[BRICS] 2025년 BRICS 외교장관회의 개최(히우지자네이루, 4.28-29) : 브라질, 중국, 러시아, 남아공, 인도네시아, UAE, 에티오피아 등 참석
말레이시아	5.9.	[철강] 투자통상산업부, 한국·일본·중국·인도산 철강 제품 반덤핑 최종 판정 결과 발표
인도	4.28.	[전자] 정부, 전자부품 제조를 위한 생산연계인센티브(PLI) 제도에 중국 기업의 참여 허용
	4.30.	[전자] 타밀나두 주정부, 전자산업 육성에 3천억 루피 규모 인센티브 발표
	5.2.	[항만] 모디 총리, 비진잠 국제항* 1단계 시설 공식 가동 발표 * 인도 남부지역 케랄라주에 위치한 인도 최초의 심해 환적항
	5.5.	[반도체] 타타 일렉트로닉스, 네덜란드 NXP와 반도체 협력 논의
	5.6.	[FTA] 인도-영국 FTA 체결
	5.6.	[리튬] 석탄공사, 칠레와 리튬 광산 인수 협상 재개
	5.9.	[희토류] 인도자동차제조업협회, 전기차용 희토류 수급을 위해 중국 정부에 6개월간 자동 승인 요청

■ 에너지

국가	일자	내용
미국	5.1.	[IRA] 美 공화당 하원의원, IRA 에너지 세액공제 관련 연명서한 발송 : ▲에너지 세액공제 전면 철폐 및 ▲원자력 발전 관련 세액공제 유지 촉구 연명서한 발송
EU	5.6.	[에너지] EU 집행위,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종식을 위한 로드맵*’ 발표 : 러시아산 석유·가스·원자력 수입의 단계적 철폐를 위한 9가지 조치 제시 * Roadmap towards ending Russian energy imports(REPowerEU Roadmap)
캐나다	5.8.	[원자력] 온타리오주, 캐 최초 소형 모듈형 원자로 건설 승인 : Ontario Power Generation, 209억 캐불 규모 SMR 4기 건설 계획 승인
스위스	5.5.	[수력] 에너지청, 2024년 수력 발전 통계 발표 : 용량 300kW 이상 수력 발전소 704개 운영 중(2025.1.1. 기준)
핀란드	5.6.	[원자력] 원자력산업협회(FinNuclear), 2025 SMR Business Day 개최
	5.11.	[원자력] 핀란드 에너지 기업 Steady Energy社, 헬싱키에 소형모듈원자로(SMR) 시험 시설 건설 계획 발표(2026년 말 완공 및 2028년까지 운영 예정)
루마니아	4.28.	[원자력] 프리보이우 산업단지(Priboiu Industrial Park), 美 NuScale 설계 462MW급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부지로 전면 임대 예정
	5.6.	[에너지] 루마니아, 튀르키예와 에너지 협력 MOU 체결
인도	4.27.	[원자력] 정부, 핵발전소에 외국인직접투자(FDI) 49% 허용 추진
카타르	4.28.	[태양광] QatarEnergy, Ras Laffan & Mesaieed 태양광 발전소 준공식 개최 : Ras Laffan(450MW) 및 Mesaieed(425MW) 지역 태양광 발전소 준공

「경제안보 Review」 2025년 발간 목록

발간호 (발간일)	구분	제목	저자명
25-1호 (2025.1.10.)	분석	‘美 조선·해운 강화 법안(SHIPS for America Act)’ 분석 및 시사점	최용호
	현안	美 하원 중국특위 보고서로 본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전망	황지현, 이재원
	연구동향	美 정보기술혁신재단 ‘트럼프 리스크 인덱스’ 보고서	이재원
25-2호 (2025.1.24.)	분석	글로벌 전력인프라 수요 확대와 경제안보	임산호
	현안	美·中 과학기술협정(STA) 개정 동향 및 시사점	김단비
	연구동향	AI 경쟁 관련 전문가 기고문 주요 내용	김수연
25-3호 (2025.2.14.)	분석	美 신정부 경제정책 동향의 경제안보적 시사점	유지영
	현안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 배경과 경제안보적 가치	유아름
	연구동향	FA ‘양자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경쟁’ 주요 내용	안수린
25-4호 (2025.2.28.)	분석	美 에너지 우위(Energy Dominance) 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이재원
	현안	중국 인공지능(AI) 굴기와 전략적 함의	김수연
	연구동향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전문가 평가	최용호
25-5호 (2025.3.14.)	분석	중국 메모리 반도체 산업 동향 및 경제 안보적 시사점	김단비
	현안	美 철강·알루미늄 추가 관세 조치 및 영향	황지현
	연구동향	FA, “The Real China Trump Card” 요약	유지영
25-6호 (2025.3.28.)	분석	「미국 우선 투자정책」 분석 및 시사점	안수린
	현안	2025년 중국 양회 경제 분야 주요 결과 및 시사점	김단비
	현안	美 USTR 조선·해운 분야 301조 조치 제안의 주요 내용 및 영향	최용호
	연구동향	Merics, 美-EU의 對중국 정책 우선순위 제언 보고서 발간	임산호
25-7호 (2025.4.11.)	분석	글로벌 LNG 동향과 미국의 LNG 정책	유아름
	현안	美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4.2.)의 내용 및 평가	유지영
	연구동향	「미국의 AI 지배력과 전력 공급 병목 현상」	황지현

「경제안보 Review」 2025년 발간 목록

발간호 (발간일)	구분	제목	저자명
25-8호 (2025.4.25.)	분석	유럽방위백서 발표 동향 및 우리 방산업계 영향	임산호
	현안	트럼프 행정부의 무기 수출 행정명령: 주요 내용과 함의	이재원
	연구동향	「중국 이중용도 조선산업의 부상과 대응」	김단비
25-9호 (2025.5.09.)	분석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동향	황지현
	현안	미국 우주 기술보호협정(TSA) 체결 동향	김수연
	연구동향	「중국 성숙공정 반도체(foundational chips) 지배전략과 함의」	유아름
25-10호 (2025.5.23.)	분석	미국 상호·기본 관세 관련 국내 정치·법적 쟁점 분석	최용호
	현안	美 「AI 확산 규칙」 철회 및 AI 반도체 수출통제 동향	안수린
	연구동향	「예정된 분열?: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한 미국과 EU의 대응」	이재원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온라인 다운로드 -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게시판

https://www.mofa.go.kr/www/brd/m_26799/list.do

경제안보 Review - 메일링 서비스 신청

cesfa@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CESFA,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는
공급망, 첨단 기술, 전략 산업 등의 주요 경제안보 현안 대응에 필요한 정책 분석과
국내외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안보 Review는 격주로 발간되는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정기 발간물로,
경제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정확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전달하여
민관합동의 경제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지의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